

| 제 5 장 |

억류 국군포로들을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했나?

억류 국군포로들을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했나?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도 벌써 60여년의 긴 세월이 흘렀다. 그간 나라를 지키다가 영어의 몸이 되어 60여년간 억류되어있는 국군포로의 송환을 위하여 우리 대한민국은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을까?

A) 대한민국의 역대 정권들의 국군포로 송환 노력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정권 하에서 일어났던 6·25 한국전은 국군의 지휘 통수권을 UN군에게 넘겨줘 미군을 주축으로 한 UN군의 힘으로 간신히 남한은 전쟁 이전의 영토를 되찾았다.

그러나 초토화된 국토에는 빈곤과 혼돈만 존재하여 내일의 연명에 정신이 없었고, 남북관계는 극도의 증오와 긴장감이 충만했을 때였던 만큼 이북 정권에 포로송환 문제를 꺼낼 형편이 못됐을 것으로 짐작된다.

다음 4·19 학생봉기로 정권을 잡은 장면 정권은 민주당 내에서 신구세력 싸움으로 정치는 간 곳 없고 정부의 기능은 거의 마비상태로 우왕좌왕 하던 중 1년도 못 가 군부의 쿠데타로 인해 붕괴되었다.

반공과 빈곤 탈피를 슬로건으로 내건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이 수립되자 북한은 “남한의 군사 독재정권과는 일체의 타협도 협상도 있을 수 없다”고 선언했으나 박정희 정권은 남북 간의 안정을 위하여 당시 이후락 중앙 정보부장을 밀사로 북파하여 얼어붙었던 남북관계 개선을 시도한 적이 있었다. 그때 이후락 부장이 국군포로 문제를 언급했다는 소문은 있

있지만 기록이 없어 그 진실은 알 수 없다.

그 다음의 전두환 군사정권 역시 남북관계 개선에 노력했다고는 하나 군사 독재 정권과는 어떠한 타협도 없다는 김일성의 태도에 국군포로 문제에 관해 이렇다 할 협상을 한 흔적은 없었다. 그 다음 노태우 정권 역시 군사 독재 정권이라는 이름으로 남북관계 개선의 흔적은 남아있지 않고 정부의 무관심은 물론 국민 전체도 포로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아는 바가 없었다.

그러나 그 다음 처음으로 들어선 민간 김영삼 정권이 탄생했으나 포로 송환 문제에는 별로 노력한 흔적이 안보이던 중 1994년 조창호 중위(당시는 소위)의 탈출로 북한에 많은 국군포로들이 잡혀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폭로 함으로써 포로에 대한 관심이 솟아나는 듯했다.

조창호 중위가 정부의 협조 아래 여러 곳에서 국군포로 문제에 대한 강연 등을 가졌으나 그 후 뒤를 이은 햇볕정책을 모토로 한 김대중 좌파정권이 들어서면서 조창호 중위의 북한 실상 폭로행각에 제동이 걸려 일체 포로 문제가 언급되지 못하게 되었다.

김대중 대통령이 햇볕정책을 내세우면서 2000년 6월에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방북,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만나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3일간의 양자 수뇌회담이 개최되었고 그 끝에 발표된 것이 6.15 남북회담 공동성명서³⁹ 이다.

별첨 C)와 같이 서문과 5개항으로 구성되어있는 그 내용은 우리 한민족 끼리를 구가하고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북한의 고려연방제와 남한의 3단계 통일론의 유사점을 감안하여 한반도의 통일을 추진토록 하는 데 합의를 봤다는 내용과 함께 제3항에 “오는 8.15를 즈음하여 양쪽의 이산 가족 상봉”을 추진한다는 것과 남한에 억류되어있는 북한의 미결 장기수 석방을 위하여 노력한다는 것 등이었다.

여기에서 가장 괴이한 것은 남한의 대통령은 헌법상 국군의 최고 통수권자 입에도 자기 나라의 방위를 위해 싸우다가 포로가 되어 불법으로 억

39 별첨 C. “6.15공동성명서” 전문 참조.

류된 자기 부하 국군포로송환문제에 대해서는 한마디의 언급도 없었다는 점이다. 국군의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자기부하 78,636명이 조국을 지키다가 포로로 불법 억류되어있는 문제는 전혀 한 마디의 언급도 없고 반면 대한민국을 전복하려던 가장 위험한 미전향 장기수 간첩 62명의 석방 문제에는 기꺼이 합의했다는 것은(6.15 공동성명 제 3항 참조)⁴⁰ 김대중 대통령이라는 분이 어느 쪽의 대통령인지 필자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다.

(필자는 62명의 비전향자를 석방한 것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국군포로와 납북자 석방에는 일체 함구하면서 62명의 장기수 석방문제에는 그토록 열의를 보였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만일 남북간의 관계 개선이라는 미명 하에 국군포로 문제와 납북자 송환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이는 분명 대통령으로서 가장 중요한 자국민 보호의 의무를 포기한 것으로밖에 이해되지 않는다.)

그 뒤 필자가 북한에서 탈출해온 국군포로 가족회 회장인 이도순(가명)씨를 만났을 때 그를 통해 6.15 정상회담에 대한 억류 국군포로와 그 가족들이 겪은 실망감을 들은 적이 있었다.

국군포로를 아버지로 가진 이도순씨 가족은 2000년에 처음으로 남한 대통령이 북한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는 남한 대통령이 우리 국군포로들을 데리고 갈 것” 이라고 믿고 너무나 좋아하며 흥분하여 잠도 못 자고 장농 속에 아껴뒀던 제일 좋은 옷을 꺼내 입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만날 것으로 기대 했다고 한다.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대통령이 국군포로들을 만나준다는 소식은 고사 하고 포로 문제는 일체 일언반구도 언급이 없다가 6.15 공동성명서에 남한에 억류되어있는 북한의 비전향 장기수 석방에 대해 노력한다는 조항을 읽고는 하도 억장이 무너져 그날 밤 온 가족이 서로 부둥켜 안고 한 없이 울면서 이제 우리는 여기 이 땅에서 죽어야 하는구나 하며 그 배신

40 6.15 동등성명서 제 3항 “남과 북은 올해 8.15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 방문단을 교환 하며, 비전향 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나가기로 하였다.” 이 합의조항에 의거 김대중정권은 그해 (2,000년) 8.15일에 비전향 장기수 전원 62명을 석방, 복송하였다.

감에 너무나 실망하여 정말 죽을 수만 있었더라면 차라리 죽었을 것이라고 필자에게 그 당시의 절망감을 이야기하였다.

이러한 국군포로 가족들의 실망과 배신감과는 정 반대로 그 당시 남북간의 정상회담을 추진하여 김대중 대통령을 수행하고 6.15 공동성명을 작성하는데 일등 공신인 당시 통일부장관 임동원(林東源)씨는 6.15 정상회담 회고록인 “피스 메이커: 남북 관계와 북핵 문제 20년” (Peace Maker) 에서 6.15 공동 성명을 반대하며 국군포로 송환문제를 요구한 재향군인회를 비롯한 보수 단체들을 남북간의 평화를 해치는 “냉전 수구세력의 방해”라고 매도하고 있다.⁴¹

여기에서 우리는 당시의 집권층의 포로문제에 대한 시각과 가려진 정책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역사는 북한의 핵 개발과 장거리 유도탄으로 남한을 “불바다로 만들겠다”는 북한 당국의 협박과 연평도 포격사건, 천안함 격침 등을 보면서 관련 임동원씨에게 지금도 그 햇볕정책이 옳았다고 확신하는지 다시 묻고 싶다.

이렇게 극도로 편이한 좌파 집권층의 북한의 일인 세습독재와 사회주의 제도에 대한 인식과 판단은 조국의 위기를 맞아 국가의 부름을 받고 나라를 지키다가 영어의 몸이 되어 영원히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그들에 대한 인식이 일반 우리들의 그것과는 너무나 괴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엿볼 수 있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으로부터 한사람의 억류 국군포로도 데리고 오지 못한 것에 대해 이유야 어찌됐든 우리는 역대 정부의 성의와 노력 부족, 나아가 억류된 국군포로를 보는 시각이 어떠한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와 정부의 제일 첫째 의무는 자국민 보호에 있지 않은가? 더욱이 그들이 조국의 방위를 위하다 영어의 몸이 된 자들이라면 더더욱 말할 나위 없다고 생각된다.

다음 노무현 정권에 이어지면서 처음으로 정동영 통일부장관 때(2006)

41 임동원 (林東源) 저 “피이스 메이커(Peace Maker, 중앙도서 발행) P.474

남북간 장관회담에서 국군포로 및 납북자 문제에 대한 언급이 있었지만 아무 성과도 없었고, 그 다음 이종석 통일부장관 때도, 그 뒤의 이재정 장관 때는 ‘포로’, ‘납북자’라는 북한이 금기로 삼고 있는 단어 대신 “전시 중 생사 불분명한 자들”이라는 해괴한 주제로 포로 문제와 납북자 문제를 다루려고 하였으나 이 또한 불발탄이 되었다.

노무현 정권 임기 말(2007년 10월)엔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방북, 경제 협력을 비롯해 국군포로 문제를 다루려 했으나 국군포로 문제에 관한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북한 인민무력부장도 일체 함구, 묵묵부답으로 대함으로써 국군포로 문제는 아예 논의도 되지 못했다.

(*** 노무현 정권에서 처음으로 국군포로 송환문제를 다루게된 동기는 국군포로 송환위원회의 미 국회에서의 수차례에 걸친 청문회와 또한 미 연방국회 회관에서의 포럼의 결과로 야기된 미 연방하원에서 몇차례의 “억류되어있는 국군포로와 납북자를 돌려보내라”는 결의서 채택⁴²과 또한 당시 미 하원 외교분과 위원장이었던 헨리 하이드(Rep. Henry Hyde) 의원 부시 행정부의 압박이 작용한 것으로 본다.)

2007년 10월 열린 남북한 정상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 일행과 동행했던 한 신문기자의 이야기에 의하면 “노무현 대통령이 김장수 국방장관을 대동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그 옆에 최용건 인민무력부장이 같이 배석한 자리에서 국군포로 문제를 꺼내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갑자기 하던 이야기를 툭 끊고 딴 곳을 쳐다보고만 있어 회담 분위기가 냉랭해지더라”고 하였다.

또 북한을 떠나는 날 김장수 국방장관이 김정일과 같이 앉아있는 최용건 인민무력부장에게 “국군포로 문제는 일단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하자 김정일은 천장만 쳐다보았고, 옆의 최용건 인민무력부장은 그렇다는 뜻의 표정을 지었지만 역시 아무 말도 없이 묵묵부답이었다고 전해 주었다. 이로써 노무현 정권의 국군포로 송환문제는 다시 더 거

42 미 하원의 국군포로 및 납북자 (일본인 포함)들의 송환 및 북한 인권침해에 대한 경고를 담은 결의서는 2005년 5월에, 2006년 7월27일에도 또 그다음해인 2007년에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의서 HR376호는 2011년 13일에 미 하원을 만장 일치로 통과되었다.

론할 기회를 갖지 못하였다.

그 다음 이명박 보수정권이 들어서면서 정권인수식에서 국군포로송환 문제에 아주 열의를 보이는 듯 하였으나 남북간의 경색된 정국은 그것도 결국 말잔치로 끝났다.⁴³

이상이 필자가 알고 있는 표면에 나타난 대한민국 정부의 포로송환에 대한 노력의 전부다. 그 중에서도 노무현 정권 때 포로송환 문제를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북측에 제기한 것은 미국의 압박과 국내 여론에서 포로 문제가 거론되기 시작했고, 또 노 대통령 자신도 군생활을 한 적이 있었고 또한 이어간 햇볕정책으로 남북관계가 비교적 좋은 편이어서 포로문제를 꺼낼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물론 역대 정권에서 북한과는 항시 물밑 접촉이야 있었겠지만 포로문제에 관한한 한번도 공식적인 회담에서 언급된 적도 없었고 따라서 어떠한 가시적인 노력도 엿볼 수 없었다는 것이 필자가 알고 있는 실정이다.

B) NGO(비정부기관)들의 노력들:

1) 국군포로송환위원회(Korean War POW Affairs)는 비 정부기관(NGO)으로서 미국 로스앤젤레스(Los Angeles)에서 2004년 한국전 참전자들을 주축으로 발족되어 본격적으로 국군포로 송환활동에 나섰다.

그 첫째 과제가 과연 북한에 국군포로들이 억류되어 있는가? 그리고 얼마나 생존하고 있는가? 왜 그들이 억류되어 있어야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송환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점을 확인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송환위에서는 우선 국방부에서 발행된 포로에 관한 가능한 모든 문건을 다 읽어보았다. 생존여부는 몰라도 포로가 억류되어있다는 것은 확인 되었다. 그러나 그 숫자는 서류마다 차이가 있었다. 그 다음은 탈북한 국군포로들을 직접 만나봤다. 당시 1994년부터 그 이후 한국에

43 이명박 정권의 정권인수위의 국방부 인수위원회 황진하씨는 인수식에 앞서 “국군포로 송환 문제는 현 정권의 가장 으뜸가는 중요한 사항으로 인식하고 있다” 라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탈북해 온 국군포로들의 수는 2004년에 이미 67명에 이르렀다.⁴⁴ 우리는 탈북한 국군포로를 모두 다 만나기를 원했지만 처음 만날 수 있었던 숫자는 불과 6명에 지나지 않았다.⁴⁵

나중에 들었지만 탈북자 전부가 북한에 가족들이 남아있어 혹시 자기들이 신문에 노출되면 북한의 가족들이 처벌 받을 것이 무서워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만난 결과부터 이야기하면 a) 아주 많은 국군포로들이 억류되어 있다는 사실, b) 모두가 너무 연로하여 이제는 자기 발로 걸어 탈출할 형편이 못 된다는 것, c) 억류 중에는 전부 강제노동에 종사했는데 너무 나이가 많아 기력이 쇠퇴하여 이제는 강제노동에서 풀려나와 살고 있다는 것, d) 1956년 김일성 지시에 의한 내각명령 143호에 따라 이제는 포로라는 신분이 없어지고 공민증을 받아 표면적으로는 일반인들과 차별이 없지만 실제로는 많은 제약이 있다는 것 등이다.

예로 들면 당에 입당, 자제들의 대학진학, 군 입대 등이 허용되지 않고,⁴⁶ 식량이 부족하면 맨 먼저 국군포로 가족들부터 배급이 중단된다는 것, 그리고 항상 공안당국의 감시하에 있다는 것 등 표면상으로는 차별을 안받는 것 같지만 사실상 사회의 밑바닥에 속하여 그 자녀들이 아버지가 국군포로라는 것을 몹시 부끄러워 한다는 것, e) 현재 생존자의 숫자는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것 (행적 연락이 금지되어 있음), 그러나 아마도 100명부터 500명 사이일 것이며 북한 공안당국은 그 정확한 숫자를 알고 있을 것이라는 것, f) 지금은 그 생존자들도 거의 치매에 걸려있거나 신체가 자유스럽지 못한 식물인간이 많을 것이라는 이야기들이었으며, g) 미국포로는 있다는 소문은 들었지만 한번도 본 사람이 없다는 것(이것은 필

44 2012년 현재 남한으로 탈북해온 국군포로의 숫자는 87명. 이중 현재 생존자는 60여명이다.

45 2004년 11월18일에 한국 여의도에 있는 63빌딩의 식당 Garden Roof에서 당시 김문수 한나라당 국회의원, Suzanne Scholte(미국 인권단체 Defense Forum 회장), 남신우(북한인권위 부위원장)를 비롯해 탈북 국군포로로서는: 조창호, 장진환, 김대성, 유영복, 박홍길, 허재석씨 6명과 가족 2명, 도합 8명과 이쪽 6명, 전 12명이 같이 만났다.

46 필자의 조사에 의하면 실제로는 이러한 제약들의 대부분은 1980년도 이후 부터는 어느정도 완화 되었음.

자가 미국사람들을 만나 국군포로 송환 일을 한다고 하면 100% 첫번째 질문이 “미군 포로는 몇사람이나 잡혀있느냐”는 질문을 받기 때문에 꼭 알아둬야 할 것으로 생각). h) 국군포로 중 많은 사람들이 북한 인민군에 강압적으로 편입 되었다는 점 등의 정보를 얻었다.

그리고 당시의 한국정부(노무현정권 때 이야기)가 포로송환 문제에 열의가 없어 보여 우리 국군포로송환위원회가 미 정부와 세계에 그 진상을 알려 한국전 참전국과 그외 인권 문제에 관심있는 각국의 협력을 받아 억류되어있는 국군포로들의 석방에 협력해줄 것을 호소하면서 한국전에서 실질적으로 UN 군을 지휘했던 미국의 연방의회 등에서 UN군의 지휘 하에서 함께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하여 싸웠던 대한민국의 국군만이 아직도 불법으로 북한에 억류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탈북한 국군포로들을 미 국회증언대에 직접 세워 북한에 억류되어있었던 동안의 실상을 증언하도록 해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날 저녁에 참석한 국군포로 출신들에게 미의회에서 증인으로 나와줄 사람을 물었으나 모두가 고개만 숙이고 말이 없었는데 유독 조창호라는 사람만이 자기가 자진하여 증인이 되겠다고 했고 또 한사람은 만약 자기 이름을 가명으로 해준다면 증인이 되겠다고 했다.

필자가 모든 경비와 신분의 안전을 책임지겠노라 했는데도 증언대에서는 것을 꺼리는 이유는(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가족들에게 어떠한 보복적 조치가 있을 것을 두려워해 표면에 나서기를 꺼린다는 이야기 였다.

그러나 조창호 증위는 1994년 탈북 이후 이미 널리 알려져 있었기에 “저는 언제든지 불러주면 어디서나 언제나 누구 앞에서나 실정을 증언 하겠다” 하는 언약을 받았고, 또 한사람은 전술한 바와 같이 가명으로 해 준다면 증언대에 설 수 있다는 언약을 받고 같이 갔던 인권운동가 디펜스 포럼(Defense Forum Foundation)의 수잔 솔티(Suzanne Scholte) 회장의 도움으로 그 이듬해 인 2005년 4월 24일 마침내 미 국회의원 회관(Rayburn Hall)에서 “억류 국군포로 문제에 대한 포럼”을 열게 되었다.

그때 많은 청중(미 국회의원, 보좌관, 참전국 대사, 영사 및 주재 무관

들이 아직도 국군포로들이 못 돌아왔다는 이야기에 모두 놀라워했다. 또한 고 조창호, 김창식(가명) 두 탈북 포로가 참혹했던 북한에서의 포로 생활의 실상을 증언하자 북한의 그 비인도적인 처우에 매우 놀랐다.⁴⁷

필자는 이 포럼의 주제 연설에서 “한국전은 양대 진영의 이데올로기 전으로서 당시 팽창일로 of 공산주의 진영과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이념의 양대 이데올로기의 대결장이 되었으며, 우리 대한민국은 유엔군 지휘 하에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하여 다 같이 목숨을 걸고 싸운 혈맹국이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전이 된지 50여년이 훨씬 지난 지금까지 근 8만명에 가까운 대한민국의 국군포로들만은 아직도 적에게 억류되어 정전된지 근 50년이 지나도록 못 돌아오고 있는 현실에 대해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 하는지, 당시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하여 싸우다가 부상을 입고 퇴역한 한 노병으로서 여러분에게 이 억류된 포로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란다” “같은 목적을 위하여 같이 피를 흘렸던 혈맹의 나라 여러분들께서는 지금도 고향을 그리며 죽어가는 지난날의 전우들을 그대로 방관만 하고 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불행한 지난날의 전우들이 죽기 전에 자기 고향 땅에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으면 그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전쟁이 끝난 지 어언 52년.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지난날의 우리의 전우는 외로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등의 내용으로 그들 특히 미국의 적극적인 도움을 호소하였다.

사실 법적으로 따지면 유엔군의 지휘 아래 유엔군의 일원으로서 싸웠던 대한민국 국군의 포로문제는 휴전협정과 포로교환 문제에 서명한 유엔 사령관에게, 궁극적으로는 UN안보리 84호에 의해 설치된 UN군에 최종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말하고 싶었다.

그러나 UN군 역시 특히 실질적으로 UN군을 지휘한 미국군의 막대한 희생 위에서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살아남아 북한의 인민공화국보다 월등히 번영을 누리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 이 포로문제를 책임져야한다고 운

47 미해군장관을 역임한 퇴역 해군제독 빌 미든돌프(Bill Middendorf)회장이 필자의 연설직후 축사 차 등단. 첫 마디가 “휴전이된지 5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한국전의 포로들이 돌아오지 못했다는 말은 실로 믿을 수 없는 놀라운 일이다”라고 말했다.

운하기에는 마치 물에 빠진 자를 구해줬더니 이제와 보따리까지 내놓으라는 격인 것 같아서 다만 같은 목적을 위하여 싸운 동맹국으로서 그들 송환에 적극 도와 달라는 정도 이상으로는 말할 수가 없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동년 5월 25일에 미 하원 외교분과위원장인 헨리 하이드 의원이 주동이 되어 “북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불법적으로 억류하고 있는 국군포로들과 또 일본인 납치자들과 세계 각국에서 불법으로 납치한 자들을 즉시 석방하고 또 북한은 열악한 인권문제를 개선하라”는 결의서 HR #168을 그 해(2005) 5월 24일 만장일치로 미하원은 통과 시켰다.

필자는 이 결의안이 통과되자 곧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를 서울에서 고 조창호 중위와 그 부인, 그리고 조 중위의 군 동기인 이완춘(李完春) 퇴역 중령과 같이 국회의사당의 한나라당 당 대표실에서 한나라당의 황진하 의원, 전여옥 의원과 같이 그 자리에 입회했는데 박근혜 대표는 저와 지팡이에 의지해 서 있는 조창호씨를 보자마자 “저희들은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이 먼 곳까지 노 박사님께서 찾아와 저희들이 진작 해야 할 일을 걱정하게 해 할 말이 없습니다”라고 먼저 사과 말씀부터 시작하여 “국군 포로 문제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데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는 말도 듣게 되었다.

그로 인하여 2006년 3월 24일 날짜로 ‘국군포로 처우에 관한 건’이라는 종전의 법이 ‘국군포로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7895호’로 개정되어 국군포로 본인뿐만 아니라 동 법률 제15조-(1)의 “국방장관은 제 6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억류지 출신 포로 가족에 대하여 지원금을 지불 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이제는 북한 출신의 탈북 가족들에게도 남한의 국군포로 가족과 같은 지원금을 받게 되었다.

이는 북한에서 억압과 차별대우를 받아오던 탈북 국군포로 가족들에게는 명예회복과 함께 경제적으로 크게 도움이 되는 법으로 개정된 것이다. 그러나 당시(2005년)의 집권당인 열린우리당의 대표(당시 이부영씨)와 당 간부들을 만난 결과는 매우 대조적이었으며 아주 실망적이었다. 그들은 한결같이 “우리가 아무리 힘을 써도 잘 안된다”는 성의없는 답변만

되풀이 하였고 그 뒤를 이어 당 총재 문희상씨를 면접하려고 필자의 고향 출신 여당 의원을 통하여 면담을 청하였으나 “포로문제는 잘 해결되지 않는 문제이니 만나봐야 별 할 이야기가 없으므로 차라리 안 만나는 것이 피차간에 좋겠다”는 면담 거절 회답만 돌아왔다.

이러한 열린우리당의 태도는 국가를 지키다가 영어의 몸이 되어 50여 년 이상 동토의 땅에서 지옥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억류된 국군포로 문제에 대하여 북한과의 관계를 우려하는 여당으로서는 별로 성의가 있어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태도는 야당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의 성의 어린 태도와는 너무나 대조적이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법률 제 7895호가 국회에서 통과된 것을 보면 열린우리당 내에서도 국군포로 문제에 관심이 있는 의원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지만 불행히도 필자가 당시의 여당 간부들로부터 받은 인상은 포로송환 문제에는 별로 성의가 있어 보이지 않아 크게 실망하였다.)

한편 미국 연방의회 하원에서는 2006년 4월 27일 헨리 하이드 하원 외교분과위원장 주동으로 미 국회하원에서 “북한 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청문회”가 개최되어 우리는 한국에서 고 조창호 중위를 초대하여 증언대에 세웠다.

필자는 그 청문회에서 미국 국회의원들이 약 6시간이나 되는 긴 시간동안 점심도 먹지 않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청문회에 출석한 증인들의 증언을 열심히 경청하는 그 진지한 태도에 정말로 존경을 금할 수 없었다.

그날의 증언에는 일본의 메구미 요고다(惠 横田) 어머니의 눈물겨운 호소와 탈북 국군포로 조창호 중위의 북한에서 억류생활의 실태, 그리고 남북 되었다가 탈북해온 한국 어부 한 분의 억류생활 실태의 증언이 있었으며 이로 인하여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한국군 국군포로들과 메구미 요고다를 포함한 일본인 피납자와 기타 납북자들을 인도주의에 입각, 즉시 돌려 보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북한의 심각한 인권 침해 문제들을 경고하는 미하원 결의서 HR #234를 동년 5월 24일자로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결의서는 당연히 한국 노무현 정권에게 압력으로 작용하여 그 뒤 북

한과의 장관회담에서 또한 그 뒤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의 방북 시에도 북한에게 포로송환 문제를 제외하게 만들었다고 본다.

우리 국군포로송환위는 그해(2006년) 11월 제네바의 국제인권위원회에 직접 탈북 국군포로인 고 조창호씨를 대동 참석하여 북한의 불법적이고 반인도적인 국군포로 억류 사실을 폭로하려고 미국의 인권문제에 단체에서도 가장 유력한 프리덤 하우스(Freedom House)를 통하여 참석 허가를 받아 두었으나 애석하게도 조창호 중위가 아오지 탄광에서 얻은 병세(기폐증이 폐암으로 발전했음)의 악화로 작고하게 되어 실현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본 송환위는 그 뒤에도 한국을 방문할 때마다 외교통상부의 북한 대사와, 국방부의 대북정책과, 국회의 국방분과위원회의 여러 의원들에게 늘 포로문제 해결을 해주도록 부탁하였지만 그들도 별 뾰족한 수가 없어보여 한국 정부 차원에서의 가시적인 노력은 엿볼 수 없었다.

2010년 이명박 정권수립 이후의 강경한 대한민국의 대북정책에 따라 남북간의 대화의 여지는 없어졌고, 억류되어있는 국군포로들의 나이를 감안 할 때 생전에 그들을 송환한다는 것은 거의 절망적으로 생각되었다.

따라서 본 송환위에서는 이 문제를 UN에 부탁하여 도움을 받아 처리하는 것 외에는 별 방도가 없다고 결론, 2010년 한국을 방문, 박근혜 의원, 황진하 의원, 박진 의원, 그리고 외통부의 북한대사, 국방부 담당 관계 이상철 준장 등 만나는 사람마다 송환문제 해결을 남북간의 대화로만 풀려고 시간을 더 지체 말고 “UN이 한국전과는 밀접한 관련이 있으니 이 문제를 UN 에 넘겨 그 도움을 받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호소했다.

이와 함께 UN이 한국전에 관여한 UN안보리 결의서 제 82호, 83호, 84 호, 85호⁴⁸의 사본과 또한 우리가 NGO로서 UN에 낼 탄원서의 내용도 상세히 설명하면서 그 사본도⁴⁹ 함께 전달하였다.

또한 당시 현인택 통일부장관을 통일부에서 만나 2시간 이상이나 면담하면서 포로송환 문제는 결국 UN의 힘을 빌리는 방안밖에 없지 않겠

48 별첨 사본 참조 (별첨 D)

49 별첨 사본 참조 (별첨 E)

느냐는 의견과 우리가 NGO로서 UN에 제출할 송환문제에 대한 진정서의 사본과 또한 우리 송환위가 북한 김정일 정권을 헤이그(The Hague, Netherlands)에 있는 ICC(국제 형사재판소)에 정식 고발하겠다고 고발장 사본도⁵⁰ 같이 전달하였다. 이 2시간 이상의 회담에서 현 장관은 한마디의 말도 없이 그저 듣고만 있었다.

그 뒤 우리는 예정대로 2011년 2월에 김일성 정권을 세습 받은 김정일 정권을 정식 전쟁범죄자로 고발하였으며, 4월에는 UN인권위에 포로송환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이러한 방대한 법률적인 논거와 또한 탈북 국군포로들의 증언들을 직접 수집하느라 우리 송환위의 법률 고문인 김한희 박사가 근 1년 이상에 걸쳐 이 서류들을 만들었으며 그 노고에 대해 우리 송환위는 무한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

이렇게 힘들여 만들고 제출한 고발장에 대하여, ICC측에서는 일단 북한 영토에서 벌어진 전쟁 범죄는 ICC 관할권에서 벗어나서 ICC의 관할권 내에서 그러한 일이 벌어졌다는 추가 자료가 없는한 조사를 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즉, ICC측은 포로들에 대한 전쟁범죄는 북한 영토에서 행해졌기에, ICC의 관할권이 행사할 수 없는 것임을 통보해왔다.

이에 우리측에서는 휴전협정 당시에 휴전선 내의 포로교환 구역은 북한 영토가 아니라 중립국 송환위원회에서 관할했던 지역이기에 그 지역으로 마땅히 이동시켜 송환 의사를 타진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을 하지 않았기에 포로의 권리를 박탈한 행위가 성립되지 않느냐, 그리고 그러한 권리 박탈 행위가 일어난 장소의 일부는 중립국 지역으로 볼수가 있지 않느냐라는 추가 자료를 보냈다.

이처럼 우리측은 ICC에 북한측의 일부 범죄행위에 대해서 다시 검토하여 달라고 재차 자료를 보냈으나 답변이 없었다.

한편 일부 국제법 법률전문가들도 관할권에 대한 우리의 주장이 ICC측에서 동의를 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것으로 보는 의견도 있다. 일부 법조인들은 우리가 중립국 송환위원회 관할 지역에서 발생했다고 주장하

50 별첨 사본 참조 (별첨 F)

는 답변서에 대해 ICC측에서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는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측이 최근에 받은 의견 중에는 권오곤 판사를 보좌하는 UN유고 재판소 소속 변호사가 개인 의견에서 정확히 이유를 지적하지 않았지만 영토와 관할권에 대하여 우리측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 ICC측이 받아들이지 않을것 같다는 의견이다.

가장 큰 문제는 ICC의 관할권이 있는 남한 영토에서 발생된 포로를 획득하는 행위 자체는 전쟁 범죄가 아니지만, 포로를 생포하여 확대하고 억류한 행위는 북한 영토에서 벌어진 것이라고 우리는 강력히 지적 하였다.

그런데 김박사가 2013년 헤이그의 ICC를 직접 다시 찾아갔던 바 ICC에서는 우리 송환위가 보낸 독촉장에 대해 여러가지 보충 추가재료가 필요하다는 이메일 회신을 필자에게 보냈다는 사본을 보여주면서 자기들이 우리의 회신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는 말을 듣고 왔다.

내가 그 이메일을 받지 못한 것은 그 시기에 저의 컴퓨터가 고장났던 때문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UN인권위에 낸 탄원서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도 하등의 반응이 없어 우리 정부 차원에서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